

# KERI Insight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oons@keri.org)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창조경제는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어 기술과 지식의 창의적 융·복합을 이끌어 냈으므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핵심에는 창의와 혁신을 견인하는 기업가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의 견인차임을 강조하고,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수행한 기업가정신의 국제적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지난 2년간 예년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험 자본, 공정 혁신, 제

품 혁신 등의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이 강화되어 온 긍정적인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 인식, 문화적 인식, 기회적 신사업, 경쟁,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가정신은 성공적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이뤄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가정신의 발전에서 미흡한 측면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 함양된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아가는 앞으로의 길에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우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검토 배경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출범 후 국정목표로 창조경제를 설정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하에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설 등 각종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추진 중<sup>1)</sup>

- 창조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원동력이 고갈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추진
- 창조경제를 발판 삼아 (1)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2)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며, (3) 신시장 개척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 1.1절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 경제'는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 및 실행과제들로 구성

□ 한국경제연구원(2013)은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TF를 구성 및 출범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장의 확대 및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제시

- 창조경제란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창의적이며 자유롭게 산업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를 지칭
- 한국경제연구원(2013)은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올바른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발현을 지목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회복을 위해 창

의인재 양성, 시장 생태계 조성, 그리고 규제의 품질 개선 등 현재의 제도적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기업가정신이란 '기존 경제질서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구체화시키는 합리적인 도전정신'을 의미

- 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창조경제가 모색하는 산업 간 융·복합의 근간이 되는 가운데, 이들을 원활히 발휘하는 데에 있어 기업가정신은 매우 큰 영향력
- Sala-i Martín et al.(2012) 또한 기업가정신을 기존의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 시되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지목
- 하지만 정부의 역할 확대를 초래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자금지원은 기업가정신의 부정적 요소만을 부각시켜 창조경제의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로 전략
- 한국경제연구원(2013)이 제시했고 본 보고서가 분석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및 창조경제 간의 관계는 추후 2절에서 자세히 소개

1) 3월 2일 대전센터, 4월 28일 대구센터의 개설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기업과 연계된 혁신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

## 1.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수립 및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4b)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대추구경제(rent-seeking economy)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장기적 저성장의 기조로부터 탈출할 목적으로 마련
-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전환해 경제의 역동성을 재확보하고 민·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에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
- 규제 개혁과 재정준칙 강화와 같은 공공부문의 혁신을 포함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방향도 제시

□ <그림 1>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2) 역동적인 혁신경제, (3) 내수·수출 균형경제 라는 3대 추진전략은 9+1개의 주요 과제 및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구체화(관계부처 합동, 2014a)<sup>2)</sup>

- 3대 추진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달성에 필수적 선결 요건이자 달성 목표
- ‘기초가 튼튼한 경제’가 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대추구경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도적 혁신을 통해 차단하여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

- ‘공공기관 정상화’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각종 비리의 원천적 차단 및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시장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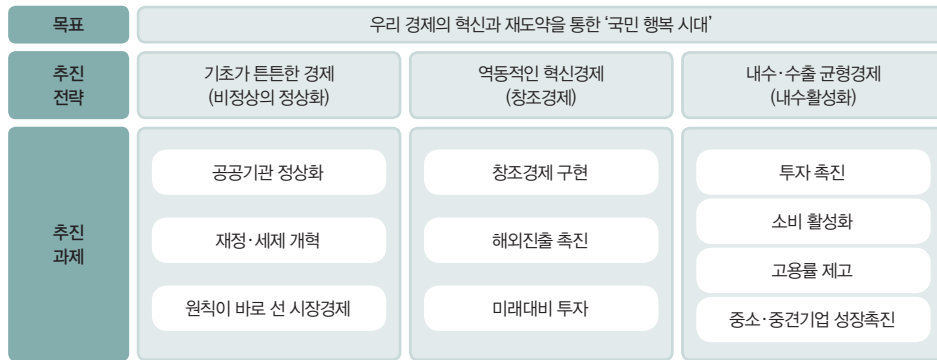
-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 간 융·복합 및 창의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확대를 모색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같은 과제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

□ 추진과제로서 창조경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그리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은 <부록 II>에서 설명

- ‘공공기관 정상화’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경우 한국경제연구원(2013)이 창조경제 달성 및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제시했던 제도적 개선방안과 방향성이 일치
- 두 가지 과제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시켜 기업가정신이 비생산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발현되어 지대추구 경제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최소화
- 가시적 성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
- 다만 관치경제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자생적 해결력에 대한 신뢰가 지속될 때에만 창조경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 친화적 시각의 유지가 관건이 될 것임.

2) 1개의 추가 목표로 통일시대 준비를 설정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경제적 효과 연구 등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경제적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그림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변화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

- 창조경제가 국정과제로 최초 제기되었던 2013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를 원활히 추구하고 나가기에는 미흡한 수준(한국경제연구원, 2013)
- 2014년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이 창조경제라는 목표와 일치한다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향상되어야 마땅함.
- 비록 특정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정책들의 도입시기가 너무 최근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의 분석을 통해 가능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변화를 분석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

- 2절에서는 Schumpeter와 Kirzner가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정의를 소개하고,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재조명해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에 주는 함의점을 검토

- 기업가정신을 생산적 vs.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으로 구분

- 3절은 GEDI(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Index)상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지난 2년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

- 4절은 기업가정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의 세부 항목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기업가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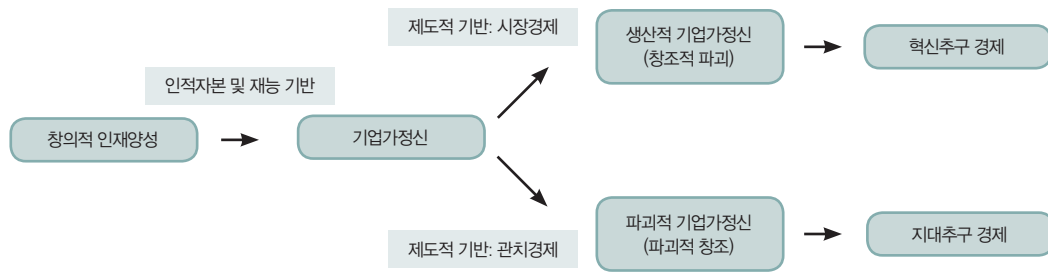
- 5절은 본 보고서의 정책적 방향성을 거론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 2. 기업가정신과 창조경제

□ 한국경제연구원(2013)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혁신적 경제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

-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은 Cantillon(2001[1730]), Say(1964[1803]) 등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Schumpeter(1934[1912])와 Kirzner(1978)에 의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발전이 구체화

〈그림 2〉 기업가정신의 발현 과정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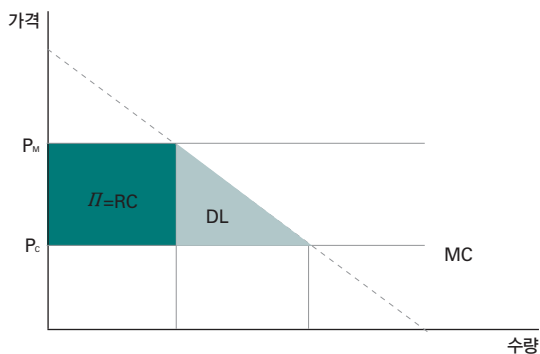
- Schumpeter는 기업가정신의 혁신가적 측면을 강조하며 새로운 재화나 생산방식의 시장 도입을 가능케 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기업가정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이끄는, 즉 새로운 시장의 탄생 및 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원동력으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반면 Kirzner는 기업가정신의 발견가적 측면을 강조하며 아직 인식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존재로 인식
  - 기업가정신은 수익창출기회를 포착하고 구체화시키는, 즉 혁신에 기반한 경제주체들 간의 경쟁을 도모해 기존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
- 혁신가와 발전가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재화나 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구체화시키는 합리적인 도전정신을 의미
- Schumpeter와 Kirzner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만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은 수익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응<sup>3)</sup>
- 기업가정신 분석의 효시인 Cantillon은 거지와 강도와 같은 부류에서도 기업가정신이 존재함을 거론
- Baumol(1990)은 기업가정신을 ‘생산적’과 ‘파괴적’(e.g.,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으로 분류하며 잘못된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이 파괴적으로 돌변한다고 제시
- Murphy, Shleifer, and Vishny(1991) 또한 잘못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인적재능의 배분이 왜곡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분석
- Baumol과 Murphy, Shleifer, and Vishny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개인적 소양 및 능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건에 따른 인적자본의 배분 문제임.
-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 및 발현 방향은 인적자본 및 재능뿐만이 아니라 사적재산 보호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 의해 결정
-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는 〈그림 2〉와 같이 인적자본 및 재능기반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충실한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능
- 창의적 인적자본이 축적되었더라도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등 시장개입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익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파괴적 창조를 유발시키는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이 발현

3) Schumpeter 또한 기업가정신을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며 독점권의 확보에도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요구된다고 인식했으며 Hobsbawm은 다음과 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오해를 지적 "It is often assumed that an economy of private enterprise has an automatic bias towards innovation, but this is not so. It has a bias only towards profit"

- 이는 창조경제라는 혁신추구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이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함께 시장경제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위적인 진입장벽 등 비시장적 보호환경 속에서 기업가정신의 확충 방안들에 창조경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지대추구 경제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 지대추구(rent-seeking) 경제체제란 정상적 시장경쟁을 통한 수익이 아닌 규제를 통해 조성될 수 있는 인위적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의미
  - 한 예로 수익창출기회 및 시장지배력은 생산성 및 기술적 우위와 같은 시장경쟁력뿐만이 아닌 관세(tariff), 면허제(license) 등의 획득과 같은 진입장벽을 통해서도 가능

〈그림 3〉 지대추구활동의 경제적 문제점



- 〈그림 3〉과 같이 시장경쟁 하에서는 불가능한 수익(II)이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존한 가격인상( $P_c \rightarrow P_M$ )을 통해 가능
  - 규제포획, 독점권 확보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한 수익추구가 가능하다고 기업가들이 인식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
  - 지대추구활동은 미시경제학에서 흔히 거론되는 자중

손실(DL)뿐만이 아니라 수익기회의 인위적 조성을 위해 추가적 비용(RC)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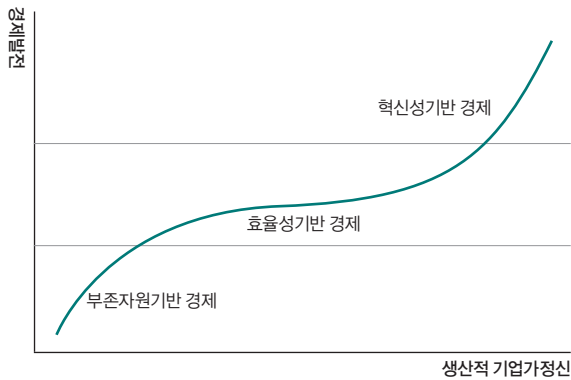
-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를 위해 발현된다면, 이는 혁신적 제품이나 생산방식을 통한 시장의 확대가 아닌 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파괴적 창조를 유발
- 지대추구의 문제점은 Krueger(1974); Posner(1975); Tullock(1967)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Murphy, Shleifer, and Vishny(1993); Olson (1982)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
- 지대추구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파괴적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 정책들이 가장 지양해야 할 결과이며 규제 혁파 등 시장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는 제도들의 개선방안이 핵심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의미

-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요건의 중요성은 Acemoglu and Robinson(2001); Boettke and Fink(2011); Boettke and Coyne(2008) 등이 강조
- 제도(Institution)가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기업가정신이 발현할지 결정하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와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이 제도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
- 사유재산권의 확보 등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요건의 확충 없이는 기업가정신이 생산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전무<sup>4)</sup>

-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에 필수적인 이유는 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창조경제가 모색하는 산업 간 융·복합의 근간이 되기 때문

4) Boettke and Fink(2011)는 다음과 같이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 "As rules of the game, institutions structure incentives and affect the mechanism employed to transmit information. Individuals respond to incentiv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ey have at their disposal.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us determines if people engage in productive, unproductive, or destructive behavior."

〈그림 4〉 생산적 기업가정신, 경제발전 단계, 그리고 창조경제



- Ács and Szerb(2010)가 제기하고 한국경제연구원 (2013)에서 소개되었던 〈그림 4〉와 같이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가중(World Economic Forum, 2012)
- 생산적 기업가정신은 기존의 경제질서 탈피와 새로운 수익창출기회의 포착 및 구체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산시켜 혁신성기반 경제에서 한계효용이 극대화
  - 부존자원의 활용성과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 효과는 부존자원과 효율성기반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 이는 기존 산업 간의 융·복합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한 무형적 자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의미
- 기업가정신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기회를 합리적으로 발견·포착하여 혁신 및 상품화를 시도하고 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있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키플레이어 역할을 수행
-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도 모르고 예상치 못했던 혁신을 통해 발전과 성장이 이뤄지고 함께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다수의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

- 경제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시장의 원칙에 부합해 시장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서만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가능
-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수많은 과거의 정책들은 시장에서 부여되는 유인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 경제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

### 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및 변화

-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통해 각종 경제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그 방향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이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다면 1차적으로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
  - 최근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달성을 위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지대추구 경제체제에 대한 우려감 등 구조적 여건 개선에 정책적 목적을 부여
- 창조경제에 적합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확충했다는 의미
- 창조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며 경제성장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으로만 확인이 가능

### 3.1 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 INDEX

□ 본 보고서에서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GEDI(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Index)는 Szerb and Ács(2011)에 의해 고안

- 이전에 발표되던 GEINDEX(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 근거해 이론적 및 통계적 보완을 거쳐 2011년부터 GEDI로 발전되어 지난 4년간 발표(Ács and Szerb, 2009)

- GEDI는 George Mason University(미국), Imperial College London Business School(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영국), University of Pecs(헝가리) 등 4개 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연 1회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평가지수

- GEDI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주민(adult population) 서베이 데이터에 GCI(Global Competitive Index)와 같은 제도적 측정치를 접목해 추정

- GEM의 경우 주민(adult population)과 전문가

(expert)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베이 결과에 기초해 만들어지며 1997년부터 발표

- 국가별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용 중이나 국민의 기업가적 소양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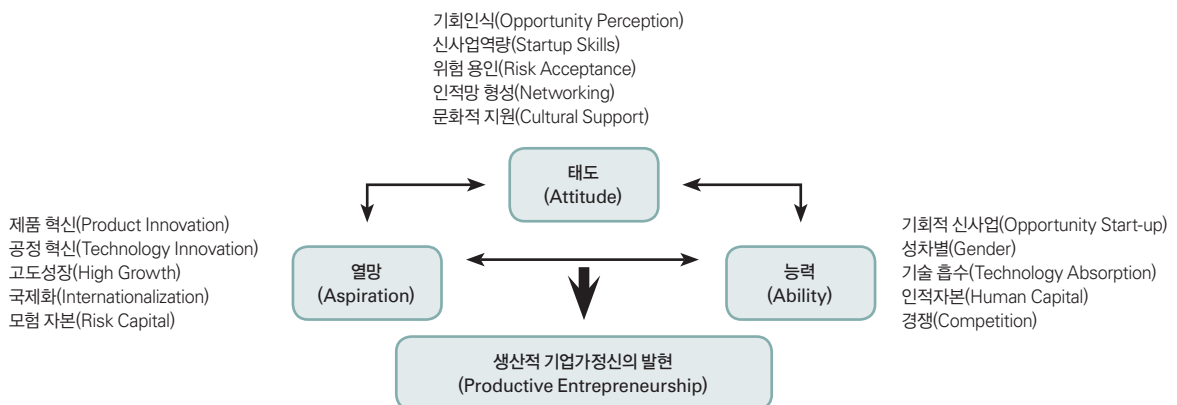
- 따라서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질 혹은 발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가정신 이론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본 보고서의 기업가정신 분석에 GEM 대신 GEDI가 사용된 이유는 GEDI의 경우 국가들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기 때문

-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기업가적 소양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GEDI는 국가별 기업가적 인적자본 및 재능 기반뿐만 아니라 발현 방향에 대한 분석에 용이

- GEDI는 <그림 4>에서 소개된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관계, 즉 발전 단계별로 상

<그림 5> GEDI의 구성과 생산적 기업가정신





〈표 1〉 GEDI의 구성

구성목록	설명
열망	창업되는 기업과 신사업의 질적 요소를 측정
제품 혁신	혁신적 제품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사업환경을 통해 신제품 도입 및 생산 역량을 측정
공정 혁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기업 비율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고려해 측정
고도성장	향후 5년간 고성장을 계획하는 기업 비율과 혁신적 제품 및 생산방식을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 여부를 고려해 측정
국제화	기업의 내수 탈피 정도 및 수출 능력과 국가의 경제적 세계화 정도를 고려해 측정
모험 자본	비공식 채널을 통한 투자의 규모 및 비율과 IPO 등 벤처자금의 규모 등 자본시장의 성숙정도를 고려해 측정
능력	기업가와 영유하는 사업의 특징적 적합도를 측정
기회적 신사업	규제적 제약 및 효율성으로 부여되는 경제적 자유와 생계적 목적이 아닌 기술력 등 비교우위에 근거한 기회적 창업 정도를 통해 측정
성차별	여성 기업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율과 기회에 대한 제도적 요건을 통해 측정
기술 흡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 기업에게 중요한 신기술 흡수력 및 확산도와 ICT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비율을 통해 측정
인적자본	국민의 교육 수준과 직원 연수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정도를 고려해 측정
경쟁	기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제품 및 시장의 독특성을 고려해 측정
태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 태도를 측정
기회 인식	시장의 규모와 도시화를 고려해 거주 지역 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잠재적 창업 기회부여 정도를 측정
신사업 역량	직장 경험을 통한 현장실습과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습득한 신사업 추진 역량을 측정
위험 용인	신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잠재적 기업가에 주는 영향력과 회사의 재정정보 공급, 채권자 보호 등 제도적 지원 요건을 측정
인적망 형성	잠재적 기업가와 신사업을 지난 2년간 개척한 타 기업가 간의 인맥형성과 인터넷을 통해 타 지역과의 연결 정도를 고려해 측정
문화적 지원	국민이 기업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및 친근감과 국가의 부정부패 수준을 고려해 측정

이하에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구분해 국가별 수준의 측정을 시도

- 경제발전 단계별로 상이하게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을 〈그림 5〉와 같이 각기 5개의 부분(pillar)으로 구성된 3개의 부지수(sub-indices)로 측정
- 〈그림 5〉의 3개의 부지수와 15개의 부분은 Ács, Szerb, and Autio(2014)가 설명하며 〈표 1〉에서 추가적으로 서술

□ GEDI의 경우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간의 병목적(bottleneck) 영향을 고려하며 기업가정신을 측정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업가정신 수준의 추정을 시도

- 기업가정신은 복잡한 부분 요소(e.g., GEDI의 경우 〈그림 5〉의 15개 부분)로 구성되며 모든 부분의 종합적 조합을 통해 영향력이 발휘
- GEDI는 복잡한 부분 요소들 간의 종합적 조합을 고려하기 위해 병목적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
  -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15개 부분 중 부족하거나 저조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타 부분들의 영향에 대한 제한적 요소로 작용
- GEDI는 병목적 알고리즘을 사용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며, 3개의 부지수를 통해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시가 가능

- 한국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딛던 2013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를 원활히 추구해 나가기에는 미흡한 수준
  -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3년, 우리나라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은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전인 2012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후퇴
  - 우리나라는 GEDI 전체 순위에서 지난 2012년 26위에서 2013년 37위로 추락했으며 대다수 세부 항목에서도 미국, 이스라엘 등 기업가정신 선진국과의 격차가 증폭
  - 이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력에 비해 낙후한 수준이며 타 국제지수에서 나타나는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도 뒤쳐지는 수준
- <표 2>가 정리하는 것과 같이 2014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2013년 대비 순위상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창조경제라는 목표에는 미흡한 수준
  -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는 국제지수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순위는 여전히 뒤쳐지고 있으나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환
  - GEDI를 구성하고 있는 부지수 중 태도(Attitude)에서 순위상 소폭 하락했으나 효율성과 혁신성 기반의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능력(Ability)과 열망(Aspiration)에서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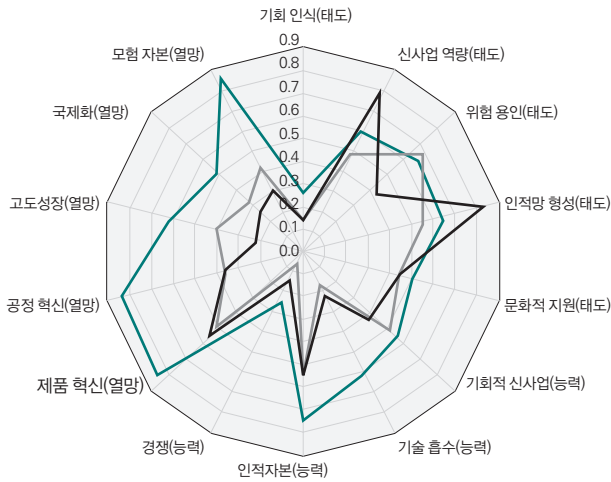
- 세 가지 부지수의 종합적 조화를 통해 측정되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에는 지난 2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상위권 국가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3년 연속 가장 뒤쳐지게 측정되고 있는 능력 부분은 생산성 향상과 창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성장능력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
- <그림 6>은 지난 3년간 GEDI를 구성하는 세부항목(pillar)별 우리나라의 변화로서 긍정적인 변화(바깥 쪽으로 팽창)를 보임.<sup>5)</sup>
  - <표 2>의 지수 및 부지수에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2012년 대비 2013년 다수 세부항목에서 후퇴하는 현상 발생
    - 신사업역량, 위험 용인, 경쟁을 포함해 태도 및 능력 부분에서 후퇴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2012년 대비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토대가 부실화
    - 이는 열망 부분에서 현상유지 및 개선되었던 모험 자본, 국제화, 그리고 고도성장의 긍정적 영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2012-2013년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세부 항목별 변화는 한국경제연구원(2013)이 지적했었던 잘못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한 지대 추구 경제의 고착화 가능성을 제기
    -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대(rent)를 선점하는 효과가 시장경쟁 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혁신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 2012년 대비 2013년에 후퇴했었던 우리나라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은 그 후 1년간 위험용인을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개선

<표 2>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도적 기반, 그리고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국제순위

분류	2012	2013	2014
Doing Business Index	8/183	8/185	7/189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19/144	25/148	26/144
Economic Freedom Index	31/179	34/177	31/178
GEDI	26/79	37/118	32/120
태도 (Attitude)	19/79	33/118	36/120
능력 (Ability)	36/79	59/118	54/120
열망 (Aspiration)	26/79	33/118	26/120

5) 성차별(Gender)의 경우 2014년부터 새로 추가된 세부항목으로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해 금번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제외

〈그림 6〉 우리나라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세부항목별 변화(2012-2014)



항목		2012	2013	2014
열망	제품 혁신	0.55	0.49	0.84
	공정 혁신	0.36	0.36	0.83
	고도성장	0.22	0.39	0.62
	국제화	0.25	0.32	0.48
	모험 자본	0.31	0.41	0.85
능력	기회적 신사업	0.42	0.53	0.56
	성차별	-	-	0.12
	기술 흡수	0.20	0.17	0.60
	인적 자본	0.54	0.53	0.75
	경쟁	0.13	0.05	0.23
태도	기회 인식	0.14	0.15	0.26
	신사업역량	0.79	0.49	0.60
	위험 용인	0.42	0.69	0.66
	인적망 형성	0.83	0.55	0.64
	문화적 지원	0.45	0.45	0.52

- 〈그림 6〉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거의 대부분 세부 항목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추이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로 전환
- 〈표 2〉에서 나타났던 순위적 변화보다 세부항목으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에서 개선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방향전환에는 성공했다고 평가가 가능
- 세부항목의 질적인 개선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생산적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1절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어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적합한 시장환경 조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가 가능

□ <표 3>은 GEDI가 2014년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120개국을 순위상 20개국씩 8개 구간으로 분류한 결과치

- 〈표 3〉과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은 2014년 현재 중상위권(8분위 중 3분위)에 속해 있으며 이는 스페인, 일본,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는 〈표 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에도 똑같은 중상위권에 속했으며 당시에 스페인, 일본, 사우디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

〈표 3〉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수준별 국가 분류(2014년)

GEDI 구간	>64.8	>46.85	>42.50	>37.00	>31.20	>28.05	>20.90	>0
GEDI 평균	70.20	54.35	45.25	39.33	33.71	29.73	24.15	18.53
ATT 평균	68.78	49.03	44.13	39.65	34.03	31.55	27.09	17.03
ABT 평균	70.76	53.92	41.00	39.79	36.51	32.84	27.69	23.97
ASP 평균	71.06	60.20	50.71	38.62	30.66	24.87	17.77	14.63
대표국가	미국, 호주, 핀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한국, 일본, 루마니아, 사우디	중국,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스, 남아공	타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마케도니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알제리, 파라과이, 필리핀	베네수엘라, 가나, 이집트, 케냐, 카메룬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표 3>의 분위상 분류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표 2>에서 확인했던 순위의 변화에 따르면 2분위에 속했던 2012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단계
- 하지만 2013년 4분위에 속했던 콜롬비아가 2014년 2분위로 급등한 사례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개선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sup>6)</sup>

□ 우리나라의 2014년 생산적 기업가정신 국제순위는 <표 3>을 시각화한 <그림 7>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2013년의 경우는 <표 1.1> 및 <그림 1.1>을 참고

- 2013년 생산적 기업가정신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2014년에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도 계속해서 1분위 혹은 2분위에 위치
- 생산적 기업가정신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시장의 원칙에 충실하고 자유로운 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 또한 높은 수준<sup>7)</sup>

- 생산적 기업가정신 순위에서 선두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다수 미주 및 서·북유럽 국가들이며 일부 남미 및 중동 국가들도 높은 순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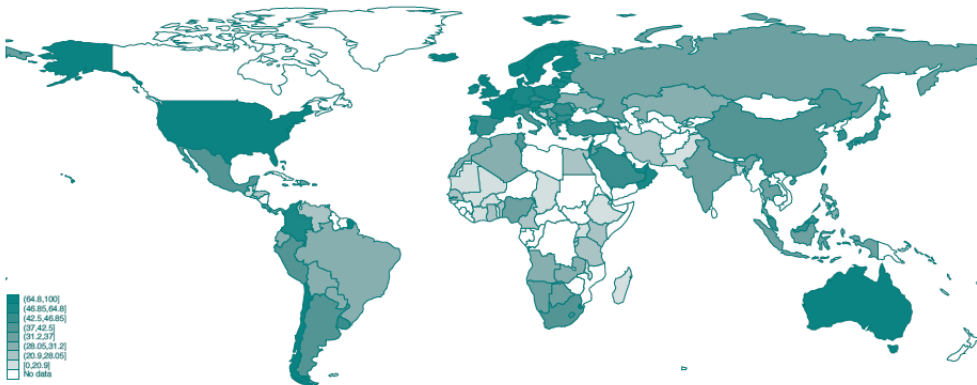
□ <그림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 또한 높아지는 정(+)의 관계가 존재

-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0.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1인당 국내총생산과 GEDI 및 부지수들 간에 존재하며 열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 이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가중되며 혁신성 기반 경제에서 열망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임(Sala-i Martín et al., 2012).

<표 4> 상관관계: 생산적 기업가정신과 1인당 국내총생산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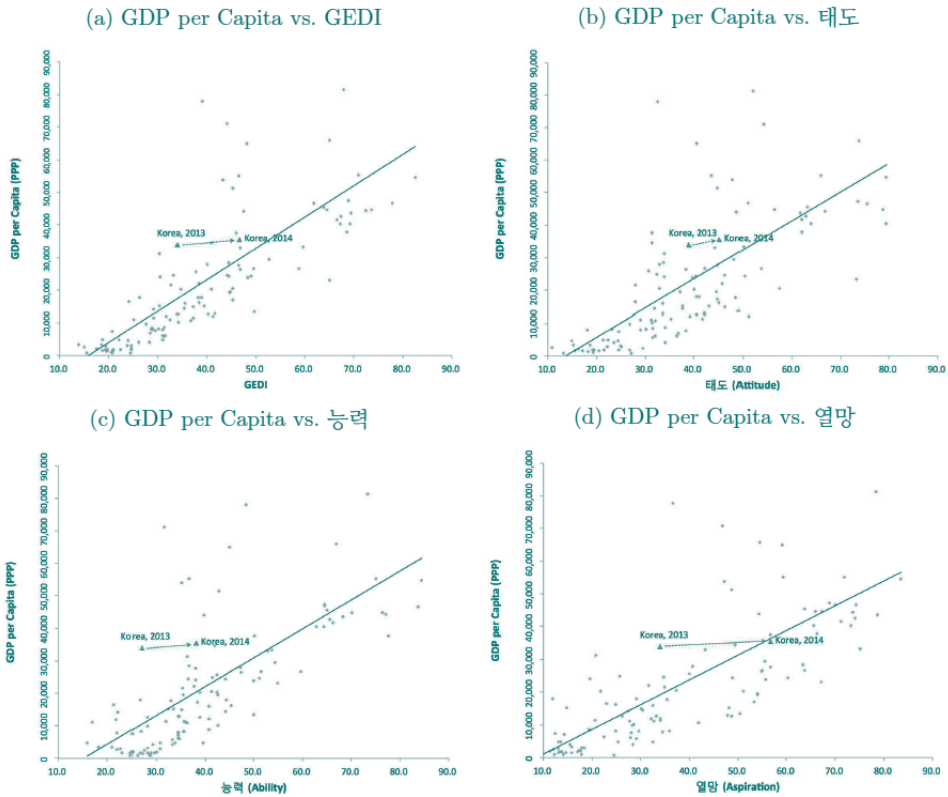
	GEDI	태도	능력	열망
1인당 GDP	0.7152	0.6547	0.6359	0.7084

<그림 7> 생산적 기업가정신 세계 열지도 (2014년)



6) 2013년 대비 2014년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콜롬비아를 포함해 인도, 싱가포르, 핀란드, 프랑스 등이며 이와 반대로 2009년 후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등은 대표적인 후퇴 국가  
 7) 2013년 상위국가 중 하나였던 캐나다는 2014년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

〈그림 8〉 생산적 기업가정신과 1인당 국내총생산(2014년)



- 또한 2013년 추세선의 좌상편에 위치했던 우리나라는 2014년 추세선과 가까운 위치로 이동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으로 탈바꿈
  - 이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생산요소로서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

-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된 이후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생산적 기업가정신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존재
- 세부항목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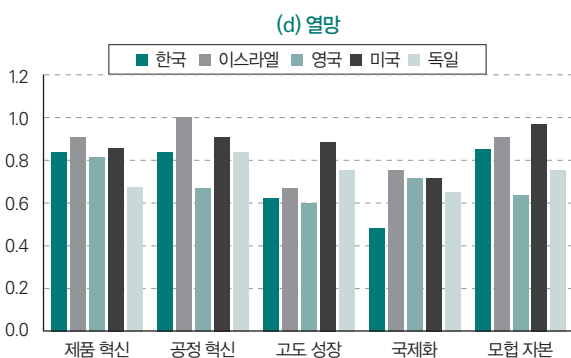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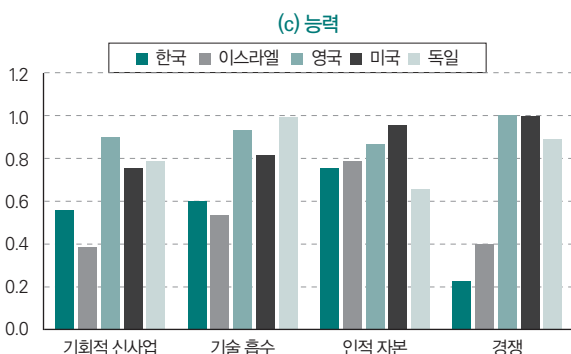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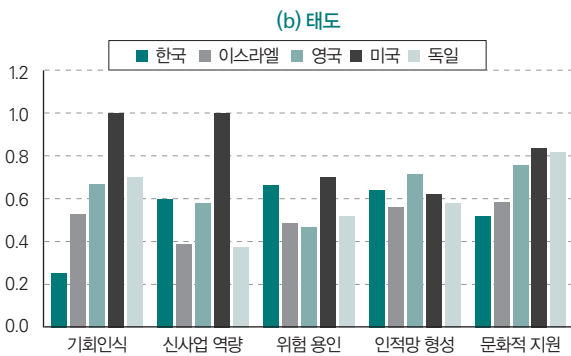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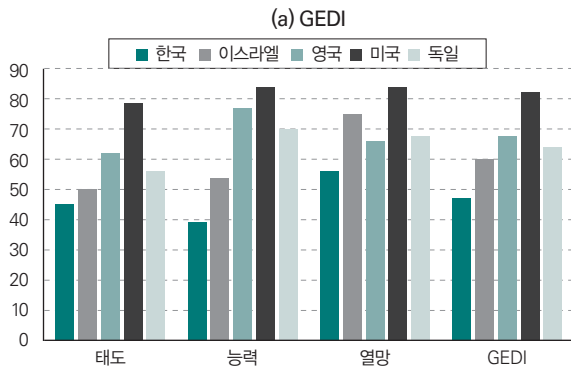
#### 4. 정책적 시사점

- 3절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2013-2014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은 전반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도 낙후된 수준

- <그림 9>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거의 전(全) 세부항목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특히 기회인식, 문화적 인식, 기회적 신사업, 경쟁, 그리고 국제화 항목에서 취약<sup>8)</sup>

8) 각 세부항목이 측정하고 있는 분야는 〈표 1〉을 참고

(그림 9)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주요국 비교(2014년)



- <표 1>에서 설명하고 있는 GEDI의 세부항목 중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항목

**기회 인식(Opportunity Perception):** 기회 인식은 잠재적 기업가가 거주 지역 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창업 기회 정도를 측정

- 기회 인식이 취약하다는 것은 창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작거나 지역별 도시화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각종 진입장벽으로 막혀있는 시장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중심지(hub)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문화적 인식(Cultural Support):** 문화적 인식은 기업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친근감 정도와 국가의 부정부패 수준을 측정

- 비정상적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통한 기회부여가 상대적으로 크며 기업가에 대한 불신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
- 기업가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타파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한 부당한 이익 기회를 소멸시킬 필요

**기회적 신사업(Opportunity Startup):** 기회적 신사업은

- 생계형 목적이 아닌 기술력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창업과 규제의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
- 창업 등 각종 경제활동을 막고 있는 규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창업이 시장 확대를 피하는 혁신적 창업이 아닌 최소생계비를 위한 생계형 창업이라는 의미
- 지역별로 발생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규제, 즉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행사되는 규제에 대한 심도있는 개혁방안의 도입 및 추진이 필요
-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창업시장을 기술, 제품, 서비스의 특화를 통해 시장

의 확대를 꾀하는 혁신적 창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

**경쟁(Competition):** 경쟁은 기존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및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 구축 정도를 측정

- 시장의 고착화 현상으로 인해 기존 제품과 서비스가 영위하는 시장지배력이 높아졌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시장지배력은 낮아졌다는 의미
- 기존 제품과 서비스가 영위하는 시장지배력은 대다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로 가능해지며 허가산업을 포함한 전(全) 산업에 걸쳐 시장자유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시장지배력과 규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공정거래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기업들의 내수시장 의존도 및 수출능력과 내수시장의 세계화 정도를 측정

- 세계화와 시장개방이 법제화에서는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시장장벽이 존재해 외국기업과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부족하다는 의미
- 수출시장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산업에 대해 과감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

## 5. 결론

□ 기업가정신은 자율적·생산적·혁신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가 자칫하면 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배제된 정부 주도형·정부 개입형 정책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과오를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

□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가정신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필요

-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존은 산업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고 한계산업·부실기업의 과밀화 등 기형적 성장 풍토를 조성하여 갈수록 민간의 경제활동 동기를 퇴색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시장경제의 원칙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만이 기업가정신을 자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양시킬 수 있음.

##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01.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Press.
- Ács, Zoltán J and László Szerb, 2009. "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GEINDEX)."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5 (5):341-435.
- — — 2010. "Global Entrepreneurship and the United States." Tech. rep., Office of Advocacy,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Ács, Zoltán J and László Szerb, and Erikko Autio, 2014.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 2013*. Washington D.C.: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 Baumol, William J. 1990.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5):893-921.
- Boettke, Peter and Alexander Fink, 2011. "Institutions First."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7 (4):499-504.
- Boettke, Peter J and Christopher J Coyne,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hilanthropic Enterprise." In *Non-Market Entrepreneurship: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edited by Gordon E. Shockley, Peter M. Frank, and Roger R. Stough.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71-88.
- Cantillon, Richard, 2001[1730]. *Essay on the Nature of Commerce in Genera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Hobsbawm, Eric J. 1999 [1969]. *Industry and Empire: From 1750 to the Present Day*. The New Press.
- Kirzner, Israel M. 1978.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ueger, Anne O.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291-303.
-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1991.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s for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2):503-630.
- — — 1993. "Why is Rent-Seeking So Costly to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3 (2):409-414.
- Olson, Mancur,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Economic Rigidi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Posner, Richard A, 1975. "The Social Costs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4):807-828.
- Sala-i Martin, Xavier, Beñat Bilbao-Osorio, Jennifer Blanke, Roberto Crotti, M Drzeniek Hanouz, Thierry Geiger, and Caroline Ko. 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2-2013: Strengthening Recovery by Raising Productivity."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49-68.
- Say, Jean Baptiste, 1964[1803].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New York: Augustus M. Kelley.
- Schumpeter, Joseph A. 1934[1912].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zerb, László and Zoltán J, cs, 2011.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Methodology." *Working Paper Series*.
- Tullock, Gordon, 1967.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Economic Inquiry* 5 (3):224-232.
- World Economic Forum, 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 관계부처 합동, 2014a.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3월 5일, 대한민국정부.
- — — 2014b.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1월, 대한민국정부.
- 한국경제연구원,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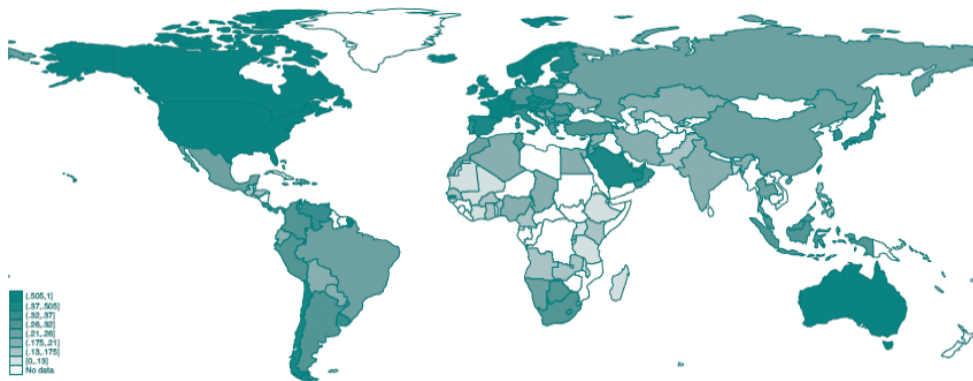
## 〈부록 I〉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수준별 국가 비교

〈표 I.1〉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수준별 국가 분류 (2013년)

GEDI 구간	>0.505	>0.37	>0.32	>0.26	>0.21	>0.175	>0.13	>0
GEDI 평균	0.57	0.43	0.35	0.29	0.23	0.19	0.15	0.11
ATT 평균	0.59	0.46	0.37	0.34	0.28	0.26	0.18	0.11
ABT 평균	0.62	0.44	0.34	0.30	0.25	0.19	0.17	0.14
ASP 평균	0.49	0.40	0.33	0.23	0.16	0.13	0.10	0.07
대표국가	미국,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스페인,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콜롬비아, 그리스, 루마니아, 남아공, 마케도니아	중국, 멕시코, 타이,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파라과이, 알제리, 인도, 베네수엘라	필리핀, 가나, 케냐, 카메룬, 과테말라, 파키스탄	우간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그림 1.1〉 생산적 기업가정신 세계 열지도 (2013년)



〈부록 II〉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sup>9)</sup>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

□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 과제 개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마련	고용세습, 과도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정상화계획을 공공기관 스스로 마련 및 이행
이행결과 점검	38개 중점관리기관은 2014년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기관은 '15년 평가시 점검
국민체감도 조사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에 방만경영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 반영('14년)

□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 과제 개요

입찰비리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li> <li>'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li> <li>*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입찰업무 2년간 조달청에 강제위탁</li> <li>*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제도 개선 추진</li> </ul>
불공정 거래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 근절</li> <li>* 공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 점검, 불공정거래 집중점검</li> <li>불공정 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li> </ul>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과제 개요

모든 정보공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개편</li> <li>*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공</li> </ul>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년~'17년) 로드맵에 따라 정보공개 방 확대</li> <li>*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비율 : ('13년) 15.2% → ('16년) 60%</li> </ul>
정보공개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3.0 추진을 경영평가에 반영</li> <li>개방 모범사례 발굴 전파</li> </ul>

□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 과제 개요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추진</li> <li>*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기능점검 (~'14년 상반기)</li> <li>* 38개 중점관리기관 기능점검 ('14년 하반기)</li> </ul>
경쟁원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은 기업 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을 제고</li> <li>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비핵심 사업 처분 등 추진</li> </ul>
자회사·출자회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출자회사 설립 시 시장성 검토를 통해 민간영역에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을 차단</li> <li>자회사·출자회사 정보공개·공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li> </ul>
인센티브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평가체계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li> <li>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기관은 일정 범위 내 자율 증원,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 자율권 부여</li> </ul>
R&D 투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R&amp;D 활동을 경영평가에 반영</li> </ul>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산학연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 간 협업 강화</li> </ul>

9)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및 추진상황(기재부, KDI)을 인용·정리한 것임.

□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과제 개요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li> <li>*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부채감축 계획 확정('14.2월)</li> </ul>
자산매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헐값매각 시비가 없도록 매각시기 분산 및 매각방식 다양화</li> </ul>
공사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li> </ul>

□ 재정 지출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과제 개요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li> </ul>
협업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R&amp;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협업 강화</li> </ul>
성과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 추진</li> </ul>
재정규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원 연계 지출(pay-go) 등 제도화 추진</li> <li>월간 재정동향, 통합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li> </ul>

□ 보조금 개혁

▶ 과제 개요

부정수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추진</li> <li>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국고보조금의 중복·불법 수급 가능성 차단</li> <li>비리 보조사업의 사업방식 변경·폐지 검토 제도화</li> <li>부정수급 관련 지표를 개발해 목표 설정 및 관리</li> </ul>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정·집행·성과 등 과정을 전면 공개</li> <li>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기관은 외부 회계 감사·정보 공사 의무화</li> </ul>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필요성·성과를 전면 재검토</li> </ul>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 과제 개요

既往 도입 제도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既往 도입 제도 안정적 정착 시행</li> <li>* 기업, 민원인들과 함께 T/F 등을 구성, 실태 점검, 결과 공개</li> </ul>
하도급 불공정관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근절</li> <li>*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신고포 상금을 신설, 기술 탈취 감시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li> </ul>
비정상적 유통관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비용전가행위 집중 시정</li> <li>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공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14년 상반기)</li> </ul>
가맹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li> <li>*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14.2.14 시행)</li> <li>업종별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을 비교 평가하여 매년 '프랜차이즈 리포트' 발간('14년~)</li> </ul>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과제 개요

비정규직 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 촉진</li> <li>* '비정규직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협약 체결('14년)</li> <li>기업별 고용형태 공시,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완화 방안 마련</li> </ul>
비정규직등 근로 조건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강화</li> <li>최저임금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강화</li> </ul>
정규직 보호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해고제도 개선방안 마련</li> </ul>

□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과제 개요

임금·근로시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li> <li>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li> <li>정년 60세 의무화 조기정착 지원</li> </ul>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li> <li>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li> <li>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li> </ul>
파견규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 강화 및 파견업무 범위·기간 확대</li> </ul>

□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과제 개요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보호업무 운영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li> <li>민간: 금융·의료·유통·통신 등 생활밀접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 점검</li> </ul>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14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태별 가이드라인 마련('14년),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다양화 방안을 마련, 개인정보 유통이력 제공 의무화</li> <li>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국가 간 협력 강화</li> <li>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정보보호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li> </ul>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보호정책의 통일성 강화, 개인정보 침해 시 신속·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현행 이원적 체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부처)를 개편</li> </ul>

2.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구현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 과제 개요

젊은세대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교육과정 등과 연계</li> </ul>
멘토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멘토 포상 및 홍보, 온·오프라인 멘토교육</li> </ul>
사업화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화, 기술개발, BM(Business Model) 기획, 실물모형 제작, 자금지원 등</li> </ul>

□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 과제 개요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개씩 설치</li> <li>* 대구, 대전에 우선 구축('14.4월)</li> <li>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에게 기술개발 → 사업모델개발 → 컨설팅·자금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며 지역경제 혁신 거점과 창업 허브로 육성</li> </ul>
--------------	--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과제 개요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li> </ul>
R&D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R&amp;D 예산 중 중소기업 투자비중 2016년 18% 달성 * 당초목표 2017년보다 1년 앞당겨 달성</li> <li>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li> <li>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으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li> </ul>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차 협력사의 공정·경영·생산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관련설비 구입 지원</li> </ul>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지원사업별 평가체계 강화</li> <li>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14년)</li> </ul>

□ 「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 과제 개요

R&D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도전적 과제 전용 R&amp;D 프로그램 추진</li> <li>기업 R&amp;D 역량을 진단·지원</li> </ul>
자금 유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유선부 보증상품’ 도입('14년 하반기~)</li> <li>* 신·기보가 기업 대신 은행 용자를 상환하고, 해당금액만큼 기업에 직접 투자</li> <li>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생산설비·검사장비 등 자금 용자기간을 대폭 연장(8년 → 15년)</li> </ul>
핵심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인력 성과보상금 도입('14년) 등으로 장기근속 유도</li> </ul>
대안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의 대안 마케팅(SoLoMo*) 활용 지원</li> <li>* 소셜·로컬·모바일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하는 방식 등</li> </ul>
관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제외('16년~)</li> <li>성실 수출입 중소기업 무담보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li> </ul>

□ 「중소·중견기업」경영애로 해소

▶ 과제 개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졸업 직후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15년)</li> <li>중견기업법 시행('14.7월)</li> <li>*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단절과 규제증가를 방지</li> </ul>
안정적 자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보의 유통회사보증을 활성화해 예비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14년~)</li> <li>전환사채(CB) 발행 등 다양한 직접금융시장 이용수단 제공</li> </ul>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중견기업 구간 신설</li> </ul>

□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 과제 개요

연대보증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 * (중진공)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등급 확대 및 가산금리 인하</li> <li>* (신·기보) 우수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면제</li> <li>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로 연대보증 수요 근본적 축소</li> </ul>
기술은행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은행(Tech Bank) 설립</li> </ul>
기업가정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Biz-cool 프로그램 확대, 고교·대학생 청년드림 CEO로 육성</li> <li>창업선도대학 확대, 성공벤처기업 특강 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li> <li>* ('14년) 23개교 → ('17년) 40개교, 매년 5~6개교 신설</li> </ul>
인턴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턴십 경험 후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 신설</li> </ul>
창업보육센터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보육센터(277개) 구조조정 촉진, 정부지원 집중·대형화</li> <li>전문 컨설팅 인력을 배치해 정보를 원스톱 제공</li> </ul>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도전 신속지원절차(Fast Track) 구축</li> <li>신용회복 결정 방식을 재기도전자 위주로 전환</li> <li>성실실패 가이드라인 제정, 성실실패시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지원 도입·확대</li> </ul>

□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 과제 개요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젤투자자를 적극 발굴, 엔젤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에 모태 펀드 매칭지원</li> <li>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li> <li>전문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등 우대</li> </ul>
정책금융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 요즈마 펀드 신설(2,000억 원, '15년~)</li> <li>여성벤처펀드 조성(500억 원, '15년~)</li> <li>매년 50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자금 지원(9,500억 원)</li> <li>* '15년부터 매년 500개 가젤형 기업을 선정, 마케팅·설비자금 지원(1.2조 원)</li> </ul>
정책금융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 요즈마 펀드 신설(2,000억 원, '15년~)</li> <li>여성벤처펀드 조성(500억 원, '15년~)</li> <li>매년 50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자금 지원(9,500억 원)</li> <li>* '15년부터 매년 500개 가젤형 기업을 선정, 마케팅·설비자금 지원(1.2조 원)</li> </ul>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신속히 도입</li> <li>*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등</li> </ul>
투자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주식의 시장성 확충</li> </ul>

□ M&A 매수기반 확대

▶ 과제 개요

PEF 관련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모투자펀드(PEF)의 영업양수방식 기업인수 허용('14년)</li> <li>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 완화('14년)</li> </ul>
M&A 진입제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14년)</li> <li>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mp;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추가 확대 검토</li> </ul>

□ M&A 인센티브 확대

▶ 과제 개요

인수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사다리펀드 내 M&amp;A지원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 원으로 확대('16년)</li> <li>중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대해 M&amp;A관련 신용공여 관련 제한 완화('14년)</li> </ul>
세금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조정 기업의 적격합병·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li> <li>구조조정 기업의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li> <li>기술혁신형 기업 주식취득 시 법인세 감면 요건과 대상 확대</li> </ul>

□ M&A 규제 완화

▶ 과제 개요

가격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제한(기준시가의 ±10%) 완화</li> </ul>
M&A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삼각합병, 삼각분할 등 다양한 방식의 M&amp;A 허용</li> </ul>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간이합병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li> </ul>

□ 융합신산업 육성

▶ 과제 개요

창조경제 비타인 프로젝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ICT 기술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 ('14년 30개 → '15년 40개 → '16년 50개)</li> </ul>
성장동력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성장동력 발굴·육성</li> </ul>
규제완화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인허가·불합리한 기술 규격 등 개선</li> <li>네트워크 고도화 및 5G 선도</li> <li>글로벌 표준화 선도</li> </ul>
주력산업의 연관서비스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 중고기계 거래 및 기계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li> <li>조선·플랜트: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핵심장비 테스트 베드 등 연관서비스 시장진출 확대방안 마련</li> </ul>
융·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융·복합 지원</li> </ul>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5년 4월 1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